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손동필 연구위원

요약

- 일상생활 공간에서 범죄사건 및 사고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2012년 서울시의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됨. 특히 서울시의 소금길 사업과 국민안전처의 안심마을 사업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대표적인 사업임
- 이 사업들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물리적인 시설 계획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모범적인 사례로 남아있으나, 다양한 지역에서의 적용방안 및 유지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정책제안

-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사업의 근거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및 내용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사업 관련 매뉴얼을 보급하고,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여 사업과정 및 결과를 연구개발함으로써 한국형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모델을 정립

1 배경 및 필요성

■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강력범죄발생 건수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사건·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02년 이후 10년 동안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발생건수가 14만여 건 증가하였고, 특히 아동, 여성,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13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 21만여 건으로 1980년에 비해 1.8배 증가
-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대책 필요
 - 살인의 경우, 건당 평균 170억 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재산범죄 4,977만 원/건, 강력범죄 4,415만 원/건, 기타범죄 3,700만 원/건(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09)
 - 기초 교통질서 위반의 경우, 불법주정차, 꼬리물기 등으로 인한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하면 연간 4조 4,560억 원(서울연구원, 2012)
-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서울시의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시범사업 실시
 - 서울시는 마포구 염리동의 저층 주거지역, 강서구 가양동의 공진중학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이후 부산에서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여러 지역에서 시행함
 - 국민안전처는 ‘안심마을 시범사업’, 법무부는 ‘법질서 실천운동 시범사업’ 등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을 실시함

■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과 시범사업

- 경찰청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보급
 - 현재까지 경찰청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발표
 - 경찰청은 2005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 발간을 시작으로, 이후 국토교통부와 공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설계 부문 ‘안전한 도시 조성계획’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처음 지침으로 도입하였고 판교·광교신도시 설계에서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부분적으로 도입
 - 이후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지자체(인천 등) 차원에서 다양한 범죄예방 가이드라인 도입

국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연구 및 지침 사례

연도	주체	연구 및 지침명
2005	경찰청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
2007	경찰청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문 상세계획(안전한 도시 조성계획)
2007	산업통상자원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표준화 연구(Ⅰ)
2009	서울시	서울시 재정비 촉진사업(뉴타운) 설계 지침
2013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2013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시범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 시행과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이 결과를 매뉴얼화하여 보급하여야 함
 - 범죄예방 관련 연구, 법 제정 등의 활동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발생
 - 특히 서구의 범죄특성 및 생활공간 현황은 국내와 많이 다르므로, 국내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함
 - 서구 상업가로의 경우 유동인구가 적어 상가의 주인 혹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면, 한국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아 보행을 적절히 분산시켜 상업가로 전체의 안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
 - 범죄발생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서구의 경우 일과시간 전이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주요 관심대상이나, 한국의 경우 범죄발생시간이나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달라 한국형 종합적인 모델 정립 필요

시간대별 범죄발생 현황

시간	계	0시~6시	6시~12시	12시~18시	18시~24시	미상
합계	1,793,400	236,457	286,294	325,856	515,431	429,362
	100%	13%	16%	18%	29%	24%
강력범죄	25,152	6,643	3,400	3,446	6,568	5,095
	100%	26%	14%	14%	26%	20%
절도범죄	290,460	47,153	52,024	69,368	85,398	36,517
	100%	16%	18%	24%	29%	13%
폭력범죄	312,579	71,954	37,590	48,948	111,783	42,304
	100%	23%	12%	16%	36%	14%
기타범죄	1,165,209	110,707	193,280	204,094	311,682	345,446
	100%	10%	17%	18%	27%	30%

출처: 통계청, 2012

- 이런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시범사업을 고찰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함

2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사업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사업

• 개요

- 서울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서울시 디자인'의 첫 번째 사업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도시의 범죄율을 낮추는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사업 추진
- 첫 번째 시범사업 대상지로 마포구 염리동을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개발이 지연되어 범죄발생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존 염리동 주민 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소금길 조성, 담벼락 보수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함

• 사업 내용

- [소금길 조성] 1.7km의 좁은 골목길의 경사로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걷기코스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겸한 쉼터로 전환



소금길 안내 지도



운동 방법 안내 표지



보안등, CCTV, 번호등

-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 및 설치] 기존 전신주에 번호를 부여하고, 인식이 뛰어난 색상으로 도색하고, 방법용 LED조명 내장기능을 통해 야간 신고 시 신고자의 위치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비상벨 등을 설치함
- [위급상황을 대비한 소금 지킴이집 운영] 소금길 운동코스 주변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 피신할 수 있도록 총 6개의 주택을 소금지킴이집으로 운영중임. 가시성이 강한 노란색 대문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색의 표시등, 비상벨을 설치하고, 일부 주택의 표시등에는 IP카메라 부착



소금 지킴이집



비상벨 위치알림 바닥표시



비상벨 설치

• 특징

- 범죄심리학자, 범죄예방 환경설계 분야 전문가, 경찰청 관계자, 아동청소년 전문가, 행동심리학자, 커뮤니티디자인 및 서비스디자이너 등 다양한 전문가가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지역 선정 및 계획안 자문
- 소금길 콘셉트가 반영된 디자인을 제작하였으며, 안전시설물, 보안등 설치, 벽화그리기 등 특징적인 범죄예방 환경설계 선진사례를 형성함
- 사업 시행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국민안전처 안심마을 사업

• 개요

- 국민안전처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동 등 재해, 범죄 관련 취약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안심마을 사업 실시
- 안심마을 사업은 주민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마을안전지도 제작, 설문조사, 안전·위해요소 분석 등을 통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안전 개선사업

• 사업내용

사례 대상지별 사업 추진내용

지역명	주민 활동	공간환경계획
서울 은평구 역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어머니회 • 재난안전지킴이 운영 • 역촌 복지두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범 CCTV, 보안등, 비상벨, 반사경, 과속방지턱 설치 • 담장허물기, 미끄럼방지 포장 • 연령별, 성별 안전지도 제작 • 보행안전 위험물제고, 보(차)도정비, 안전난간대 설치
부산 연제구 연산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지도 맵핑으로 마을 스토리 발굴 •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 독거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로 정비 • 소음방지 시설 설치로 연산터널 보행환경 개선 • 연동로 보도 및 공원주변 가로등 설치

지역명	주민 활동	공간환경계획
광주 남구 봉선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마을 지속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부영이 네트워크 운영 • 주민 안전교육 실시 • 자율방범대, 경찰지구대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순찰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주정차 예방 CCTV, 속도저감 효과의 HUMP 설치 • 교원식 횡단보도 설치 • 일방향 주차면 구획, 안전한 보도 및 방호울타리 설치 •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내 잡목 정비 - 경사로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 주민보행쉼터 조성
경기 수원시 송죽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교시 학교 주변에서 교통지도 지원 • 3인1조로 안심마을 내 취약지점 순찰 • 교통 안전을 위한 어머니 폴리스 운영 • 녹색어머니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화그리기, 화단조성 등으로 우범지역 환경개선 • 마을입구에 CCTV, 비상벨 설치 • 어린이 등하굣길 정비 • 노후주택 위험시설 개선
경기 김포시 양촌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마을 만들기 주민교육 • 마을 거점지역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확보 • 안심마을 봉사단 운영 • 걷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자연 감시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및 밀폐된 공간에 CCTV, 비상벨, 반사경 설치 • 폐가 및 텃밭에 경계울타리 설치 • 노후화 공공주택 출입통제 현관 잠금기 설치 • 주택에 접한 야산에 울타리 설치
강원 고성군 간성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행복지킴이 운영 • 포순이 교통안전 지킴이 운영 • 범죄 안심 포순이 지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된 무선 비상벨 설치 • 보안등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 학교, 시장 등 성격에 부합한 아트타일 설치, 벽화그리기로 환경 개선
충북 진천군 진천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주민방범대 운영 • 안전지킴이 시설을 표시한 안전지도 제작 • 안전시설 점검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철거 • 가로등, CCTV 설치 • 통학로 안전 헬스 등 교통사고 예방시설 구축 • 골목길 보도블록, 노면불량 정비 • 벽화그리기, 정자설치, 쉼터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충남 천안시 원성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안전 감시단 및 학교 안심지킴이 • 마을안전 봉사활동을 위한 두레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표지판, 스티커 설치 및 위급상황 시 구호 방법 등 표시 • 비상벨, 블랙박스, CCTV 설치 • 기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전남 순천시 중앙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장애인 안전귀가 서비스 • 마을 취약계층, 소외계층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관제센터 구축, 안전지킴이 활동 공간 및 마을주민 사랑방 조성 • 안전통학로, 귀가로 조성 • 골목길 진출입부 CCTV 설치 • 골목 위험지역 보안등 설치
경남 거창군 북상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안전네트워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취약구역 CCTV 설치 • 위험도로변 헬스 설치 • 사고위험지역 점멸등 설치 • 커브길 반사경 설치 • 안심센터 구축

※ 국민안전처 보도자료(2013.10.16.) 및 각 지자체 사업계획서(2013)를 바탕으로 작성

• 특징

- 범죄로부터의 안전뿐만 아니라 재해, 교통과 관련한 전반적인 안전사고에 대해 다루고 있어 총체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음
- 물리적 시설 계획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함
- 대부분 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노후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어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3 정책 개선방안

■ 범죄예방 사업 근거 법령 제정 필요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범죄예방 관련계획 및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이 부재함
 - 해외 주요 선진국은 1980년대 말부터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해 각종 법률 및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이에 근거해서 다양한 계획 및 사업 시행
 - 영국의 「범죄와 무질서 법」(Crime and Disorder Act): 범죄와 무질서를 줄이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정부의 책임을 명시한 법률로서 지역협력체 구성의 법령상 기초를 제공하고 유관기관의 책임을 명시
 - 미국 템페 시 조닝 및 개발 코드(Zoning and Development Code): 공간 계획 시 건축가, 계획가, 개발자 등이 범죄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디자인 리뷰 과정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조항 명시
- 지자체 사업의 경우 관련 조례 및 지침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례 규정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지방자치단체별 범죄예방 관련 조례

조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부산, 광주, 울산	부산 동래구, 북구, 사상구, 수영구, 영도구, 해운대구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경기도	-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	서울 동작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부산 사하구
범죄예방 관련 환경설계 지침	-	양산시

-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사업을 위한 근거 법 제정 필요
 - 근거 법령은 범죄예방,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법질서 준수라는 기본 전제하에 시행되어야 함(깨진 창문 이론)

국가의 법질서 수준은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며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 형성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은 200여 개 국가 중 46위, OECD 34개국 중 27위로 홍콩이나 대만, 칠레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 중(세계은행 법지수 평가, 2013)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했을 경우, 같은 기간 연평균 약 1%(2007년 기준 약 10조 원)의 경제성장을 추가로 이루었을 것으로 예상(한국개발연구원, 2007)

- 또한 근거 법령 제정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및 예산을 규정하여야 함
- 법령의 주요 내용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추진체계와 각 기관의 의무,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이를 통해 안심마을과 같이 물리적인 시설계획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시범사업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제도화 필요

-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의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에 적합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이 필요함
 - 국내에서 진행되는 범죄예방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체계적인 매뉴얼 없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되므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의 일관성이 부족
 - 다양한 전문가가 계획수립에 참여하지만, 사업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해서는 일련의 사업과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매뉴얼 필요
 - 국내 타 부처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 및 해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시범사업의 공통적인 절차 및 계획수립 방안을 작성하고,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환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 다양한 곳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결과를 총괄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하여야 함
 - 또한 국내 실정에 맞는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 과정 및 결과를 연차별로 연구개발하여, 적합한 범죄예방 방안과 한국형 범죄예방 사업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함

유광흠 선임연구위원(031-478-9649, khyu@auri.re.kr)

손동필 연구위원(031-478-9685, dpson@auri.re.kr)

